

북아프리카 무슬림이주자에 대한 비용편익측면에서의 다문화정책 분석*

| 김중관 · 정창근** |

Kim, Joong-Kwan · Chung, Chang-Kun

A Costs and Benefits Analysis on the Multiculture Policy for the North African Muslim Expatriates

The increasing pace of globalization has significantly affected our lives in many profound ways. One of the consequences of globalization is the rise of intermarriage, i.e., the marriage between couples of different nationalities or different social, economic, religious, or racial backgrounds. Current exposure is the cause of the problem of multicultural policies and the political ruler was revealed that a close relationship.

The host country's social instability is not only vulnerable and socially-based expatriates and their associated policies and attention appeared to be getting the biggest impact. Immigration policy, Muslim policy in each country and the country'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needs of problem solving has been utilized by the politically is that. The social influence of multicultural policy by the relationship may create a nagative effects as to pay quite a lot of social conflict and division, while another may cause positive synergy is that.

Increased the number of economic migrants to Korea when favorable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foreign migrants turn to the economic benefits,

* 본 논문은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S-2011-A0163-00010).

** 동국대학교·서울, 경제통상학부 교수, marcojk@hanmail.net



but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cost at the time of occurrence of domestic public opinion, this negative impact was to the settlers. Thus the growing worries on the different cultures in the future to accept Muslim communities, a higher level of multicultural policy is needed in this time to avoid a immigrant problem.

[Key Words: Muslim Immigrants, Multicultural Policy, Multiculturalism, Cost Benefit Effect]

I. 서론

우리나라의 단기체류를 포함한 이주 무슬림이 국내 주민등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약 17만 명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무슬림 이주자가 형성하는 지역 커뮤니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무슬림이주자의 문제를 심도있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다문화 정책 측면에서의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완화하고, 전문기술인력을 유입시켜서 부족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이슬람이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문화에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 증대와 더불어 갈등도 상존할 수 있다.

무슬림 이주자에 대한 기존 연구는 현실적으로 전체 무슬림 이주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며¹⁾, 관련 정보의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배경을 분석하거나,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을 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슬람 문화의 유입 문제를 우리의 관점뿐만 아니라, 무슬림의 관점에서 상호 공존의 가치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앞서 다문화 정책을 실험하고 있는 선협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로 이용되도록 할 것이다. 무슬림을 포함한 이주민 대책 내지 다문화정책은 경제, 사회 문화적

¹⁾ 2011년 법무부의 통계연감자료에서는 무슬림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 수가 22,211명으로 총 무슬림거주자 167,780명 중 13.2%로 짐작하고 있음.

측면에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각 각의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의 분석이 중요하다.

본 고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북아프리카 무슬림의 주요 변인으로 다문화사회를 통해서 파생되는 비용편익의 사례를 파악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다문화 및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자료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고, 특히 이슬람 문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을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무슬림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 정책 사례와 국내의 다문화환경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경제, 사회적 측면의 편익과 비용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II. 다문화주의에 대한 개념적 접근

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²⁾는 “현대 사회가 평등한 문화적·사회적 지위를 가진 상이한 문화집단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나타낸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8). 오늘날 세계화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며, 문화적 다양성은 국민국가 내에 인종, 언어, 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한 공동체가 다수 존재하는 현상이다. 국내 학자들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2)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는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 영어: multiculturalism)의 ‘다문화’라는 뜻은 ‘많을 다(多)’자에 ‘문화(文化)’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나라의 생활 양식’이라는 뜻임.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Multiculturalism>> (2012.06.22. 검색).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그 사전적 정의는 “학교, 기업, 이웃, 도시 또는 국가와 같은 조직적 수준에서 인종의 다양성과 운용상의 이유를 위하여 하나의 특정장소의 인구학적 구성에 적용되는 다양한 인종문화의 수용”임.



서 공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윤인진, 2007), 또는 “특정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과 행위”(정상준, 1995)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09).

다문화주의는 ‘개인간, 집단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³⁾ 대한민국은 1990년대 초에 다문화주의의 민족국가와 소수집단 현상이 등장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단일한 민족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기 위해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이슬람 문화와 같은 이질적이었던 주변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의견을 포함하는 인식이다.

다문화 사회유형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먼저, 민족국가의 성립 이전부터 다양한 인종 및 문화공동체가 존재했던 국가—호주,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이다. 다음으로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외부로부터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게 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상과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점진적인 외국인 유입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에 집중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는 사회의 특정한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과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의 개념은 민족과 문화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김혜순 2007)를 뜻한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최소화 혹은 다문화사회화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수단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문화적 융합 내지는 사회통합

3) ‘다문화주의’ 용어는 1957년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 캐나다에서 대중화되었으며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음. 다문화사회 현상은 1970년대에 구미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논의되었음.



의 이데올로기로서 구체적인 정책을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사회의 편익과 비용의 의미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실시간으로 각국의 정보를 접하고 노동자원 이전의 자유로 인하여 개도국에서는 선진 산업국으로 지속적으로 인구이동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세계사회에서 다문화 다민족화로 인한 여러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제 다문화국들의 사회적 과제로 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편익이란 다문화사회의 구현에 따른 정치·사회·경제적 총편익으로써 다문화사회를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과 그들의 부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치의 차이로 계산되고, 총비용은 다문화사회 수용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가치를 비교한 값이다. ‘이민자 수용의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음의 값일 경우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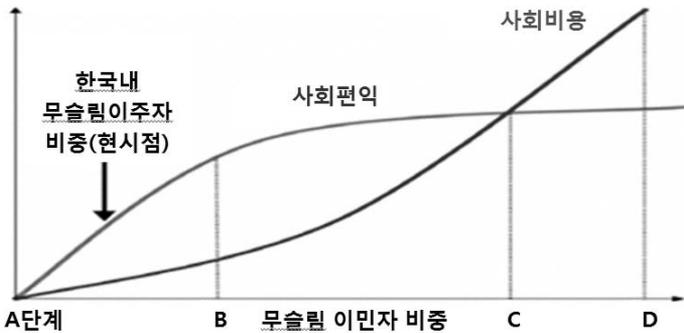
다문화사회의 시작 시점에 있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는 우리의 정체성 유지 및 경제적 개발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다.⁵⁾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은 당시 국내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슬림 이주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와 함께 이질적 문화와의 공존이라는 다문화사회의 편익을 잘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진전양태를 보면 인력수급난이 해소 자체가 경제적 편익이 되지만, 다문화가 진전되면서 일자리 경쟁, 사회갈등 등

⁴⁾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5)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주민 수용은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새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산업 생산을 늘리는 데 기여하기 때문임. 그러한 주장은 이민 수용의 긍정적 효과, 특히 경제적 편익을 강조함. 보드바슨과 반덴버그(Bodvarsson and Van den Berg, 2009: 123-179)는 이민자들은 노동력제공자로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역할하게 되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효용이 있다고 분석했음.(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김명아, 2009)

⁵⁾ 편익이란 어떤 요소를 잘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다문화의 요소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편익을 증대시키느냐에 따라서 효용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임.



의 사회적 다문화비용이 야기되는 것이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문제는 한 세대 후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을 통해 극복하기 힘들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므로 그 나라에 가장 적합한 다문화의 전략이 중요하다.



자료: 최홍외(2010), 다문화사회의 정착과 이민정책, CEO information, 253호, 2010.5.19., 저자조정

〈그림-1〉 무슬림 이주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비용관계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 연구에서 다문화 비용과 편익간 함수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간의 관계를 보면 다문화 초반기(A)에는 노동력 공급 등 편익이 두드러지지만 이민자가 늘면서 비용이 편익을 앞지르는 시점(C)이 발생하게 된다(삼성경제연구소 2011). 즉, 국가의 인구정책은 적어도 A시점과 B시점에서는 수립되어야 한다. 경제안정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해외 인구 유입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에 대한 연구에서 결혼이민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수용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 더 크다.⁶⁾ 영역별로 노동시장, 문화, 연쇄이민 영역에서는 순편익이 발생하고, 사

⁶⁾ 2020년의 전체적인 편익은 4,726억 원이고, 비용은 4,633억 원으로, 순편익이 93억 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됨. 세부영역으로 보면,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편익이 975억 원, 비용이 725억 원으로,



회복지,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 극복, 사회 영역에서는 순비용이 발생하게 된다(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김명아, 2009).

〈표 1〉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 예측 (2009~2020)

구분	2009년			2020년		
	편익	비용	편차	편익	비용	편차
전체	1171	1148	23	4726	4633	93
노동시장	242	179	63	975	725	251
사회복지	156	231	-74	632	931	-299
고립, 격리	169	203	-34	681	820	-138
문화	254	168	86	1025	677	348
사회	148	186	-38	598	751	-153
연쇄이민	202	181	21	814	730	85

자료: 설동훈 외(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 p.77
단위: 억원 (2009년 불변가격 기준)

해외이주민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비용 없이 간단히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들의 수익창출로 인한 조세기반을 확대할 수 있고, 내수를 촉진하여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 편익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다.

3. 사회적 관점에서의 다문화사회 편익

사회적 편익은 국가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회의 안정과 국가경쟁력강화 그리고 국민 여론에 입각한 다문화의 효용가치를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적으

251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함.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편익이 632억 원, 비용이 931억 원으로, 299억 원의 순비용이 발생함.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 극복 영역에서는 편익이 681억 원, 비용이 820억 원으로, 138억 원의 순비용이 발생한다. 문화영역에서는 편익이 1,025억 원, 비용이 677억 원으로, 348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함. 사회영역에서의 비용 편익은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쉽게 산정하기 어렵지만, 이슬람 문화 등과의 분규측면을 강조하면 순비용이 발생함.



로는 모든 사안들이 국가의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되겠지만 본 고에서는 사회적 편익의 범주를 다문화나 다민족집단에 의해서 이주국 국가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편익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산업화로 인한 외국인력의 지속적 유입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시장소비수요 감소를 보충하고 사회보장보험의 재정악화를 방지하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⁷⁾

미국 경제학자 Barro, R. & Sala-i-Martin, X.(2009)의 연구에서 미국의 경우 순 이민율이 1% 증가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0.1%씩 증가했다고 주장했다(Martin, 2004). 이와 같이 해외이주민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미국은 2000년부터 2025년 기간 동안 연간 70만명에서 90만명의 이주민을 유입할 계획으로 향후에도 해외 이주민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Florida, 2002). 미국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뉴욕, 보스턴 등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미국의 도시들은 다양한 인종들이 어울려 상생의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한진수(2008)는 구미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등장원인을 ① 선진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유입, ② 1960년대의 인권운동으로 인한 내국인과 소수인종집단의 권리의식의 고양, ③ 민주주의의 확립, ④ 냉전의 종식으로 지정학적 안전의 확보와 그로인한 소수인종집단을 통제할 필요성의 감소, 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의 존재, ⑥ 소수인종집단간의 사회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배경 등을 제시하였다.

강력한 종교, 문화적 유대감으로 형성된 무슬림 커뮤니티는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주 외국인 커뮤니티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족의 구성(home-building), 집단의 구성(place-building), 소수민족 경제 인프라 구축, 종교단체 결성, 다양한 형태의 협회 결성, 특정그룹의 정치화 등의 순서를 밟는 것이 보통이다(오종진 2009).

⁷⁾ 1990년대에 미국의 7,700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은퇴시기도 이민자의 주택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부동산경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음(U.S. Bureau of the Census, 1997).



다문화주의의 국가사회적 편익을 정리하면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 다문화주의를 통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

<p>사회적 편익</p>	<p>소수민족 대변 정당출현으로 사회 다양화 소수민족, 다민족의 정치력 향상 투표인원 증가로 소수민족의 사회단체화로 사회다양성 실현 국내 사회적 문제(결혼문제, 일자리문제 등) 해결수단 글로벌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문화추구 국가 이미지제고 집권자의 국가경영능력 리더십 발휘 역량 다문화를 통한 다양성이 창의적 사회의 기회 제공 소수민족의 특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 국가 자체적으로 해결불가능한 문제들의 해결가능성 제고</p>
<p>사회적 비용</p>	<p>이주민에 대한 불가피한 공적자금 지원 이주민들의 집단 세력화 및 반사회 다중폭동 발생가능 이주민의 처우에 대한 정쟁의 여지 및 기회 증가 정부의 이민자 선별기준이 작동하기 어려움(이민자의 양과 질적 수준 통제 불가능) 정착이민자의 증가로 이주 노동자 교체순환에 기반을 둔 고용허가제의 붕괴 가능성 이주근로자 계층들이 내국민으로 전환하여 사회복지 수혜자가 증가함 사회적 다양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사회혼잡비용 발생 정치참여를 위한 계몽 및 계도 이민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법률 교육 정치참여를 위한 독려 선거공약 통역서비스 세대별 통합대책비용 사회집단화로 인한 이해 충돌</p>

III. 북아프리카 무슬림 이주민의 사회적 편익

다문화사회가 등장하게 된 원인은 국가가 국가경영에 필요한 국가발전과 사회안정과 통합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다문화 정책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서 다문화사회의 사회적 편익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외 사례

1)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이미 18세기와 19세기부터 출산율감소와 산업화과정에서 노동력부족현상으로 인해 이주자들을 받아 들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경제 재건을 위해 인력교류협정의 틀 안에서 북아프리카로부터 대량의 무슬림 노동력을 유입하였다. 그러나 1974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제로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주노동력유입은 중단되었다. 제한적인 이주정책에도 불구하고 1990년, 전체인구의 7.4%에서 2000년대에 들어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49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8.1%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전체이주민중 약 40%인 197만명이 프랑스국적을 획득하였다. 출신 구성비를 보면 2005년 기준 북아프리카출신 무슬림 이주민들은 1962년 15.3%에서 2005년 42.2%로 증가하였으며, 아시아출신 이주민들도 2.4%에서 2005년 13%로 증가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으로 공화주의 혹은 동화주의원칙을 추구하면서 무슬림 이주자들이 아랍어 혹은 터키어와 이슬람 문화적 특성을 포기하고,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프랑스의 공화주의이념을 수용하는 주류사회의 구성원들과 차이를 두지 않게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러한 기조는 지도자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를 겪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재임시, 1970년대 경제위기가 발발하자 제로이민정책을 취하면서 이민자들의 권리의 인정,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 및 지원의 입장을 취하여 마그레브지역 국가들의 자국문화와 언어의 프랑스공립학교에서의 교육을 위한 교사파견프로그램의 도입과 이주노동자밀집지역이나 공장에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소설치를 용인해 주기도 했다(박단, 2005). 따라서 프랑스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통해서 전체 인구의 8.1%에 해당하는 500만 명의 무슬림과 그들의 문화를 프랑스 국내의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독일

독일의 경우도 1960-1970년대까지는 국가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하였으므로 북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터키계 무슬림 이주민을 노동력의 수급차원에서 관리 및 통제에 초점을 두었다면, 전후 사회적발전 목표와 노동력부족문제를 다문화 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이중적 정책을 유지하였다.⁸⁾ 1980-1990년대 들어 이주민 들이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자 이주자의 효율적 사회통합을 추진하 였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정치적으로 통일의 문제가 무르익게 되자 동유럽 으로부터의 난민망명신청자와 통일 이후 동유럽과 소련연방에 살고 있던 독일 계주민들이 대거 독일로 이주하였다. 이 때 이주노동자자녀에 대해 제한적으로 국적을 인정하는 국적법이 2000년에 제정되었다. 2006년 현재 독일에서 외국인, 독일인, 이주자인 동시에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후기귀환민, 이주경험이 전 무한 이주민의 자녀 등을 포함하면 이주민이 15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9%에 달한다(Statistisches Bundesamt, 2006). 이주노동자들의 출신문화권은 무슬림(북 아프리카 터키, 93만), 기독교(이탈리아, 39만), 그리스(19만), 세르비아(14만)순 이다. 독일에서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은 2002년 현재 제조업종사비율(33.6%)이 가장 높고 전반적으로 숙련수준 및 교육수준이 높지 않다.(OECD, 2008). 국적법 시행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사회통합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민법(2005년)이 시 행되었으며 이주자통합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다문화주의는 다시 재고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다문화주의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 며, 통일독일을 달성한 것도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며 다문화의 사회적 편익을 가장 많이 향유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3)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는 19세기까지 적은 인구규모임에도 국외로의 인구유출비율이

⁸⁾ 저숙련근로자들은 2년 이내의 한시적인 독일내 근로만 허용되고 고숙련 근로자들은 우대하는 이중적 정책을 폈으며, 특히 그린카드제를 통해서 IT전문인력을 2004년 이후 17,931명을 유치하였음.



가장 높은 나라중의 하나였으며 유출인구의 대부분은 청년층으로 제2차세계대전 전후에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다. 그러나 2001년 현재 전체인구 880만 중 외국인이 5.3%인 47만명 정도로 늘어났으며,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최소한 부모중 한 명이 외국인인자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에 이른다. 이러한 변화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외국인노동력의 적극적 유치와 1990년대 이후 구유고슬라비아연방국가로 부터의 대규모 난민 유입 때문이었다. 외국인들을 출신국가 별로 보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국가들이 33%, 비유럽지역이 51%이다(OECD, 2006).

스웨덴의 다문화주의는 이주국가의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의 수용에 기반을 두고 이주노동자에게는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이주노동자의 다양한 문화도 인정해주면서 이주민들을 국민으로 규정한다.⁹⁾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 들어서 남부유럽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이주민문제를 다룰 필요가 생기자 1975년 스웨덴의회는 이주노동자를 주류사회로 통합시키는 다문화주의정책을 채택하는 사회통합(목표: 평등, 선택의 자유, 파트너십) 정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로 유입된 이주자는 자국의 노동자들과 동일한 임금 노동조건, 사회복지제도를 누리며 이주자들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국적취득요건에서 혈통주의와 일정기간 동안 스웨덴에 거주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지주의’를 병용하고 있으며¹⁰⁾, 또한 배우자 및 가족재결합형태로 장기체류허가가 쉽게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에서도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여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외국인의 기여가 없으면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유치하여 국가적 편익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다문화

⁹⁾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가 다문화주의 모형에 포함됨. 이들 국가는 이주허가를 통해 이주자들이 자국의 시민사회성원이 되면 일정기간 후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함. 전통적인 이민국가들이 이 모형을 채택한 이유는 단기간에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집단을 대규모로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임. 다문화주의 모형은 동화모형과 차별배제모형의 나라들에서 표출된 이주노동정책 및 사회통합정책의 어려움에 대비되어 여러 나라에서 일종의 이념형차원에서 정책적 원리로 고려되고 있음.

¹⁰⁾ 스웨덴에서 북유럽시민은 2년, 피난민은 4년,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면 국적을 취득함.



사회를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이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여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편익을 국가적으로 취했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 사례

1) 이주민 유입과정

한국의 경우 서구 선진국들의 노동력 부족시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전후 열악한 국내 경제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시기에서 1980년대 후반 올림픽을 치르면서 성장하는 모습에서 일자리창출의 코리아드림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외국 이주민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 종교단체를 통해 일본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초에는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들이 경제적 이유로 유입되어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와 맞물려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1990년대 중반이후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확대되었고, 1990년대 말부터는 베트남과 중앙아시아 무슬림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2003년 이후 한.중앙해각서 폐지로 양국중 어느 국가에서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국제결혼이 급증하였다. 국내에서의 외국인 노동력의 경제적 효과는 91년에 11%에 달했던 노동력 부족률이 해외 이주민 및 산업연수생 등의 유입으로 2003년 4%로 떨어지는 것에서 보듯이 이주노동자가 생산직 노동자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윤인진, 2009) 한국 내 무슬림 이주자는 대략 2011년 법무부의 통계연감자료 기준으로 167,780명으로 전체 140만 외국인 이주자 가운데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수치는 국내 전체 결혼이민자 수의 2.92% 수준이다. 그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을 필두로 무슬림 여성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 참여정부의 정책

국가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국내 노동력이 3차산업으로 이동한 결과 1차



산업에서의 노동력 부족국가가 되어 외국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한편 급격하게 감소하는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과거와는 달리 이민에 대한 인식도 호의적이었다. 참여정부에서는 인권을 중시하는 국정철학과 맞물려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이 다문화 정책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과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한국이 본격적인 외국인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참여정부에서 보여준 정책의 지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그쳐, 다문화정책은 물론 외국인 정책이라는 개념도 없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1990년대 초 독일의 통일을 벤치마킹하면서 외국인 인력정책과 동포정책, 그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민정책을 구축하였다.

3) 이명박 정부의 정책

우파적 경향을 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적 인권보다는 사회통합차원으로 외국인 다문화정책은 급선회하게 되어, 박진경(2011)은 사회통합의 방편으로 동화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 예로 대표적 정책이 한국어교육정책이며 결혼이민자의 가정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는 2009년 부터 결혼이민자 귀화필기시험 부활 및 모든 귀화신청자에 대하여 귀화필기시험과 이수제를 병행할 것을 발표하였다.¹¹⁾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은 스웨덴의 정책¹²⁾을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¹³⁾ 지방재정 구조상 행정인구는 곧 예산으로 연

11) 여성가족부와 외국인지원단체의 극렬한 반대여론 때문에 자율적 참여제로 시범실시하고 있음. (Martiniello, 윤인진 역 2002; 홍기원, 2006)

12) 스웨덴의 경우 해외 이주민을 지방정부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연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13) 2007년 5월 현재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남, 경북, 제주와 60개 시군구로 전국 지자체의 24.7%임. 특히 경남의 경우 95.0%, 경북 82.6%의 시군구가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지원정책이 다문화주의와는 다른 성격으로 나타나게 되자 결혼이민자가 다문화적인 사회구성과는 거리가 먼 문화적인 병합 대상일 뿐이고(Kymlicka 2005), 결혼이민을 통해서 신속하게 ‘한국인화’ 되는 동화정책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김혜순 2006)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유럽의 경우 식민통치의 유산과 더불어 노동력부족이라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주의와는 다르게 결혼이민이라는 요인에 따른 노동력 충원의 편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IV. 사회적 관점에서의 다문화 비용

사회적 비용은 다민족과 다문화의 통합관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회적 문제나 상대적 불이익이 집단화되거나 사회문제화되어서 국가경쟁력이나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상대적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사회적 비용의 범주를 다문화나 다민족집단에 의해서 국가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사회적 비용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다문화사회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편익이 있는 반면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도 있다.

2010년 메르켈 독일 총리,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캐머런 영국 총리가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한 것에서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억제된 극우파운동과 성장한 사회민주주의 세력에 의하여 민족주의가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주요사례

1) 프랑스 사례

무슬림의 갈등으로 표출되는 프랑스의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을 2005년 해외 이주민 소요사태의 경우를 통해서 다문화적 비용을 프랑스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방리유(banlieue)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슬림 이주 노동자들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사태는 종종 발생하였지만 그동안에는 지방 정부차원에서 해결되고 있었다. 현재는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치권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의회의 문제점으로 설정될 만큼 중요하게 되었다¹⁴⁾. 그 배경은 프랑스 사회의 아랍계 마그립 3국(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뿌리깊은 차별이 작용했다(은재호,2005).

프랑스 폭동사태는 빈민문제와 이민문제, 계급갈등과 민족문제, 무슬림문제와 도시정책 등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분출된 사건이다. 경찰에게 총기를 발사, 자동차에 방화는 무슬림 이주민의 사회적 차별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며,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요인에 의한 것은 아니다.¹⁵⁾ 이와 같은 대규모 사회적 소요사태는 정치적 결과의 산물이다. 좌파 사회당이 집권했던 시기에 도시 빈민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정 의제 중 하나로 방리유 지역에 HLM(아쉬엘름)이라는 국영 서민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했고, 무슬림 이주자들을 비롯한 서민층을 지원하고자 이 지역에 공공복지시설도 많이 지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지원은 기대와는 반대로 방리유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방리유의 자급자족 체제를 만듦으로써 그들을 방리유에 가두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소외

¹⁴⁾ 2005.11.27일 파리 북동쪽에 위치한 클리시-수-부아(Clichy-sous-Bois)에서 경찰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두명의 무슬림 소년(모리타니아와 튀니지출신)이 인근 변전소 시설에 감전사하며 촉발된 소요사태에 다수의 무슬림 청년들이 개입되면서 클리시-수-부아로부터 툴루즈를 비롯한 프랑스 최남단 대도시 인근으로 확산되는데 불과 1주일 걸렸음. 과거의 경험과 달리 프랑스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소요의 규모와 양상도 12일 만에 5공화국 사상 처음으로 프랑스 전역에 비상사태법을 선포해야 할 만큼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음. 소요 발생 12일 만에 차량 5,800여대가 불타고 1,500여명이 체포되었으며,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¹⁵⁾ pressian 2005.11.28. 일자 인터넷 신문



계층에 대한 지원이 결과적으로 이주자의 계토화를 가져왔다. 문제는 이런 소외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와 아랍 출신이며 무슬림이 많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다문화사회가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는 무슬림의 이주를 억제하고 다문화주의를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추진하는데 이주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¹⁶⁾ 이 같은 결과는 무슬림이주민들을 프랑스 국민으로 통합하려는 정책을 실제로는 사회문화적 계급화로 차별대우함으로써 뿌리깊은 사회적 갈등요소를 치유하지 않고 덮어둔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편익보다는 상대적 비용이 더 커지게 되었다.

2) 독일사례

독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이민자를 실업의 원인으로 보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다문화 사회를 구축하려는 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메르켈 총리는 “1960년대 초부터 우리는 무슬림 근로자를 불러들였고 지금 그들이 독일 땅에 살고 있다. ‘그들이 계속 머물지 않고 언젠가 떠날 것’으로 여겼지만, 스스로 기만한 것이었다. 다문화 사회를 구축해 공존하지는 그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자들은 동화없이 혜택만 누리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¹⁷⁾ 독일의 정치권에서도 좌우를 막론하고 반이민을 강조한다. 그들은 이민자들로 인해 독일 사회의 지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악화되고 범죄율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¹⁸⁾

16) 또한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는 집시와 동유럽 북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했음. “절도와 구걸을 반복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을 쉽게 하겠다”며 관련법을 준비하였음. Financial Times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프랑스 응답자 48%가 “이민자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음.

17) 독일연방 중앙은행의 이사는 “국가에 의존해 먹고살면서도 이 나라를 부정하고, 자녀교육에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끝없이 ‘머리에 히잡 쓰는 아이’를 낳는 사람들을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터키인들은 높은 출산율로 독일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음.

18) 대학원신문 <http://gspres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23>



3) 스웨덴 사례

스웨덴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노동력의 유입을 위해 이민자의 정착을 장려했다. 하지만 다른 유럽 각국과 마찬가지로 스웨덴도 무슬림이민 정책을 전환하는 추세다. 기존의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확산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경제적 측면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이민 유입이 최선의 방책이었지만 사회갈등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⁹⁾

2010년 11월 38세 되는 스웨덴인이 말뚝 도심에서 ‘이민자 척결’을 외치며 총기를 난사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같은 해 12월 비교적 무슬림에 관대한 스웨덴에서 발생한 사상 최초의 자살폭탄 테러가 파장을 일으켰다.²⁰⁾ 2010년 9월 스웨덴 총선에서는 반이민주의를 내건 스웨덴 사회민주당(SD, 1988년 창당)이 5.7%(20석)를 득표해 사상 처음으로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스웨덴에서도 외국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면서 여러 사회·문화적 문제들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스웨덴 자국민들 중에서는 무슬림들이 스웨덴 문화에 적응하지 않은 채 복지 혜택만 받고 있다고 인식이 커지고 있다. 극우주의자 뿐만 아니라 사민당을 지지하는 근로자들도 상당수는 무슬림이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 시사점

사례연구에서 현지국의 사회적 불안정은 사회적으로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무슬림 이주민과 관련한 정책이나 주의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민족에 대한

19) 부르카를 입은 한 무리의 무슬림 여성들이 복지급여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백인 연금수급자를 밀치고 앞질러 가는 내용의 30초짜리 선거광고를 스웨덴의 한 방송국이 방영을 거부했다가 일 부화면을 불투명 처리하는 조건으로 내보낸 일이 있었음.

20) 수도 스톡홀름에서 터진 자살 폭탄 테러범은 이라크인으로 테러조직 알 카에다 관련 웹사이트가 “(테러범)타이무르 압달와하브가 순교작전을 완수했다”고 하면서 테러를 감행하였음.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후 스웨덴의 무슬림 이민 정책에 대한 재고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음.



문제와 다문화에 대한 문제도 비교적 잘 유지될 수 있으나 정권교체가 빈번한 경우에는 해외이주민의 처우나 다문화정책의 추진 목적 등이 사회여건과 여론에 의해서 변화하게 되므로 사회적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일국의 해외 이주민의 유입을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집중하여 고부가가치 생산쪽으로 노동력과 자본이 이동하기 때문에 저부가가치 산업에는 필연적으로 외국의 노동력이 유입되어서 충원되어야 국가의 산업균형을 유지하여 경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전개하였다. 장래에는 이주민 사회의 확대 문제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며 이주민을 받아들일 때에도 고숙련 전문인력들의 비중을 높여서, 산업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이주민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성장의 기반에서 많은 국가들이 무슬림을 포함한 외국 이주 노동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오늘날의 서국 주요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왔음이 본문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해외 이주인구를 다문화 정책이라는 범주로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종교적 이념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화하여 왔음도 확인 되었다.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살펴본 무슬림에 의한 사회적 소요사태는 자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식민지 개척과 더불어 집권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우파와 다문화 세력간 충돌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슬림을 포함한 다문화 정책은 사회적 영향관계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당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갈등과 분열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 이주노동력의 필요하게 되면 이주민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펴게 되지만 경제적 편익보다는 비용발생이 크거나 당시의 국내 여론이 부정적일 경우 바로 그 여파가 이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V. 결 론

본 고에서는 다문화로 인해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을 사회적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문화사회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 효과는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선협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전제한다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인 안정과 더불어 문화적 발전의 부가가치를 확대 정책 운영을 통하여 편익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정책의 성공사례에는 경제적으로 해외 이주민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력이 부족할 때 적극적으로 외국 노동력을 수용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듯이 외국 이주민을 저숙련 노동력으로만 한정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숙련 전문인력들도 동시에 받아들여 부족한 전문인력을 활용과 함께 이주민의 사회통합 강화를 통한 편익을 제고시키는 다문화인재 육성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계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객관적이고 계량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아카이브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이주자 특히 무슬림 관련 사안을 검토함에 있어 개별 연구자 혹은 정책입안자의 시각에서 주관적인 사례분석을 전문가들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객관화하여야 한다. 셋째, 이주민과 다문화 문제를 국내 사회적 상황과 결부시킬 때 정권의 이념이나 사상적 기초가 정권의 이해 측면에서 고려되기 쉬운 점을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상황 그리고 문화적 요인들은 충분히 예측한 상황에서 무슬림 이주민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편익비용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

[주제어: 무슬림 이주자, 다문화정책, 다문화주의, 비용편익효과]



참고문헌

- 국회입법조사처(2009).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 방향”, 『정책보고서』, 2호
- 김혜순(2006).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과 결혼이주여성: 적응과 통합의 정책마련을 위한 기본 전제들”,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 박 단(2005). 『프랑스 문화전쟁-공화국과 이슬람』, 서울: 책세상.
- 박기덕(2012). 『한국 다문화사회화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세종연구소, p.16.
- 박진경(2011). “한국다문화정책의 특성과 발전방향”, 다문화 정책 모형이론을 중심으로 『2010 한국정책학회 하계대회 및 국제학술회의』, 한국정책학회.
-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2009).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삼성경제연구소(2010). “다문화 사회정착과 이민정책”, 『CEO Information』, 2010.5.19., 제756호.
- 최중욱·모경환·김연권·박성혁(2009).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 유네스코(2008). 『다문화사회의 이해』,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역음, 동녘.
- 윤인진(2009). 『이주노동자의 한국경제 및 사회에 미친 영향과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아시아인권센터.
- 은재호(2005). “프랑스소요사태와 이민실태분석”, 『정세와 정책』, 12월호.
- 이규용 · 이해춘 · 박성재(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구조와 경제적 효과: 외국인력 노동시장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정상준(1995).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외국문학』 43, 열음사.
- 주섭일(2006). “유럽·한국 이민문제와 프랑스 무슬림 소요의 교훈”, 『유라시아연구』, 제2권, 제2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최경수(2011). “외국인력 및 이민유입의 경제적 효과”, 『KDI 정책포럼』, 제239호, 2011.8.4.
- 한건수(2008). “국내 아프리카 이주노동자의 유입과정과 실태”, 『아프리카학회지』 21, Statistisches Bundesamt, 2008.
- 홍기원(2006).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 문화관광정책연구원.
- Martiniello(윤인진역)(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다르게평등하게 살기』, 한울.
- Barro, R. & Sala-i-Martin, X.(1992). “Regional Growth and Migration: A Japan-United States Comparis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nd Japanese Economies*, 6, 312-346.
- Bodvarsson and Van den Berg(2009).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Theory and Policy*, Springer Dordrecht Heidelberg London N.Y.



- Florida, R.(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Basic Books*.
- Kymlicka, W.,(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Univ. Press.
- Martin, P.(2004). “The United States. In Cornelius, W. et al.(eds)”, *Controlling Immigr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OECD(2008). *Database on Immigrants in OECD Countries(DIOC)*.
- U.S. Bureau of the Census(1997). *Immigration Bolsters U.S. Housing Market*, Census Brief.

경향신문 2011. 8. 2일자 8면

대학원신문,

<http://gspres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23> (검색: 2012.7.9).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Multiculturalism> (Search: 2012.7.27.).

논문접수일 : 2012년 08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2년 10월 09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0월 10일